

# 75주기 맞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 '지지부진'

오늘 추념식... 여순사건위원회 출범 2년간 심의·의결 위원회 고작 6회  
접수 7000여명 중 희생자 결정 338명 그쳐... 1년 남기고 명예회복 요원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이 75주기를 맞은 가운데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가 진상규명 조사를 제 때 완료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 등 조사 대상만 7000여건이 넘는데, 조사 기한을 1년 앞둔 현재 조사 진척도가 5%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여순사건위에 따르면 지난해 출범 이래 1년 10개월 동안 접수된 희생자 신고는 총 7067건으로, 이 중 중앙위는 1545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여순사건위가 법적 활동시한인 내년 10월 5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대

상자들이 모두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순사건위는 중앙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로 구성돼 있다. 조사는 실무위에서 신고 접수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중앙위에서 희생자 및 유족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되면 피해 사실이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에 공식 기록돼 법적으로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자 가운데 중앙위에서 심의를 마친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4.8%인 345건에 그쳤으며, 희생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338명에 불과했다.

유족도 1866명만 인정됐다. 희생자·유족 외에 문헌 등을 바탕으로 제3자가 신고한 194건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못 하고 있다. 여순사건위 직권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전북 남원 지역 1건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위 차원에서 심의·의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상규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순사건위는 그동안 조사 내용을 심의·의결할 중앙위 회의를 6회밖에 열지 않았고, 그나마 올해는 2회밖에 열지 않았다. 올 초부터 지지받았던 중앙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보고서 작성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관련 논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순사건위 실무위원회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여순사건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무위 조사인력은 37명에 불과했다. 1인당 190여건의 개별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위 측에서는 중앙위에 내년도 조사인력 정원을 85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인력 확충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무위에 속하는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1년 10개월만에 단장이 세차례 바뀌는 등 조직이 안정되지 않고 있다.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올해 1월 박종필 단장에서 윤연화 단장으로 교체됐으며, 지난달 3일에는 김용덕 단장으로 교체됐다. 여순사건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라면 조사 기한을 1~2년 가량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순사건위 관계자는 "여순사건은 75년 세월이 지난 만큼 희생자와 유족 등 관련자들의 나이가 많

아 서둘러 조사해야 하는데, 중앙위와 실무위 간 간극이 커 업무에 진척이 없다"며 "중앙위 심의·의결 속도를 올리고 직권조사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여순사건 제75주기 정부 합동 추념식은 19일 고흥군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여순10·19사건 진실과 화해로 가는길, 우리가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추념식에 앞서 오전 10시 정각에는 '추모 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다. 여수시 예음마루 대극장에서는 19일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을 공연하며 순천시 순천부음성남문터 광장에서는 오는 28일까지 기획전 '위령'이 열린다. 광양시 서천면 일원에서도 28일까지 각종 추모 공연을 하며, 구례군 삼진아트홀에서는 19~20일 추모연극을 공연한다. 19일 고흥군에서는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여순사건 역사화' 전시가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고사상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 꽂았다가...

### 광주지법, 전직 농협 조합장 벌금 50만원 선고

전직 농협 조합장이 재임 시절 고사상에 놓인 돼지 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산악회가 주관한 새해 맞이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

만원권 1장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황금들녘은 '수확의 계절' 18일 광주시 서구 서창들녘에서 농부가 농기계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 대우위니아 노동자들 체불임금 잇따라 승소

### 퇴직금 등 체불액 700여억 추산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 등 사측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체불임금 노동자들이 잇달아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김소연)은 18일 위니아전자 퇴직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2억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희망퇴직을 신청해 1개월분 임금 670여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받고 퇴직했다. 그러나 사측은 퇴직금, 임금, 수당 등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 대지급금 1000여만원만 받은 실정이다. 또 광주지법 민사1단독(부장판사 김호석)도 전직 직원이 위니아 측을 상대로 제기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우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체불임금 지급이 미뤄졌고 전현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도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관련 임금 체불액은 700여억원, 납품 대금 등 광주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금속노조 위니아팀체·위니아전자 지회 등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문학적인 수준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며 "박영우 회장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체불임금, 부도덕 경영, 고의부도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우원씨 선처해 주오" 탄원서 모으는 시민들

### 31일 재판 앞두고 온라인 서명운동

오는 31일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전씨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법정에서 제출할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 네이버카페 '호프 위드(Hope with) 전우원'은 지난 8일부터 시민단체 '전두환심판국민행동'과 함께 전씨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호프 위드 전우원은 전씨가 지난 3월 양심선언

을 하고 5·18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사죄한 이후 이를 응원하는 이들과 모여 개설한 온라인 모임이다. 탄원서에는 '전씨는 목숨을 걸고 가족의 죄를 폭로하는 과정에 마약 복용을 했으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입국해 재판을 받고 있다', '초범에 자수를 했고 상습적 투약은 아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씨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폭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미국에서 일하며 스스로 번 돈의 대부분을 약자를 위해 기부하는데 썼다', '전두환 후손으로서의 죄의식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처벌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호프 위드 전우원 측은 탄원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해 2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모은 뒤, 재판 기일에 맞춰 법정에서 제출할 계획이다. 18일 현재까지는 1600여명의 서명이 모였다. 전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3월 17일 미국에서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항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 디옥시메탐페타민),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 ☆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 수목장 장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